민주 의장 싹쓸이…민노 부의장 첫 진출

■광주·전남 기초의회 원구성 마무리

초선의원 약진…의장 3명·부의장 15명 배출

곡성군 의장·부의장 모두 40대로 가장 젊어

지난 16일 화순군 의회를 끝으로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27개 시·군·구의회 원구성 결과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의회는 상임위원장단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의장의 표준 모델은 '정당인 출신 58.8세 재선 의원'이었다.

이번 원구성에서는 여성 의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부의장에는 광주시의회 정현애 의원과 장흥군의회 김화자 의원 등 2명 만이 여성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일당 독주체제**=시·도의회를 포함한 광주·전남 29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장은 민주당이 전원 석권했다.

31명의 부의장(시·도의회는 2명, 시·군·구의회는 1명씩)은 민주당이 21명, 민주노동당이 2명, 무소속 8명 등이다. 비율로 따지면 의장은 100%, 부의장은 67%를 민주당 의원이 차지한 셈이다.

하지만, 민선 4기 지방의원 원구성과 비교해보면 민노당 소속의원 2명이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장단에 입성했고, 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의장 점유비율이 33%를 차지한 점은 변화로 볼 수 있다.

◇**초선 약진**=이번 원구성에서는 초선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박주현 의장과 함평군의회 양규모 의장 등 3명의 초선 의장이 탄생했고, 부의장의 경우 전체 절반인 15명이나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의장은 초선이 3명, 2선이 12명, 3선 9명, 4선 3명, 5선 2명 등이다. 최다선인 5선은 광주 북구의회 고재을 의장과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장이다.

부의장은 초선이 15명, 2선 10명, 3선 4명, 4선과 5선 각 1명씩 등이었다. 광주시의회와 함평군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이 모두 초선이었다.

◇**40대 의장**=의장의 평균 연령은 58.8세였다. 이 가운데 40대 의장이 5명이었으며, 5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장의 경우 최연소는 광주 남구의회 권용일 의장으로, 44세였으며, 최고령은 함평군의회 양규모 의장으로 67세였다.

부의장의 평균연령은 52.7세였으며, 40대가 9명이었다. 이중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부의장이 42세로 최연소였다.

곡성군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40대로, 광주·전남 27개 지방의원 중 가장 젊은 의장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지역위원장 선거 달아 올랐다

6·2 지방선거 두자릿수 득표율에 중앙당 관심 높아져

광주 김광만씨 등 4명…전남 김문일·박재순씨 등 경쟁

한나라당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린 탓에 중앙당의 '관심'까지 높아지면서 시·도당 위원장 후보군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김광만 시당위원장과 정용활 서구갑 당협위원장, 김정업 광산을 당협위원장, 송환기 전 광산을 부위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년간 시당 운영 경험과 당원과의 친밀감 등의 강점이며, 정 위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보폭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 위원장도 최근 후보군들의 늘면서 불꽃튀는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전남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문일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과 정 훈 국민통합행동본부 총재가 전남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재순 전 최고위원과 주봉심 여수 갑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일 위원장과 정 훈 총재는 출마선언을 선언한 뒤 사실상 당원과 대의원을 접촉하는 등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

한나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는 등 호남에서 최근 한나라당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데다 중앙당도 이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후보군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의원 수 확정과 공고 일정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교육의원들 도의회 현장방문 보이콧

상임위 민주당 독식 불만…시기·방식 등 싸고 논란 증폭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교육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간 갈등으로 19일로 예정됐던 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이 부분적으로 파행을 빚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9명의 의원이 광양 태금중학교와 여수교육청 등을 찾아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정작 현장방문에는 교육위 소속 교육의원 5명이 모두 불참해 전체 9명 의원 중 4명만 참여했다.

교육의원들의 불참은 "민주당 소속인 위원장과 간사가 교육의원과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일정 등을 짜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교육의원을 배제한 채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차지한데 따른 불만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박병학 의원은 "상임위에 과반수를 교육의원으로 둔 것은 이들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교육의원 5명은 지난 15일 결의문을 내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간사 등의 '독식'을 항의하며 상임위 활동을 거부키로 했었다.

전체 9명의 의원 중 5명인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게되면 도교육청의 교육관련 조례안 처리 등이 힘들어져 의사진행에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조직개편 등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자칫 도교육청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역민들의 시각도 곱지 않다. 자리 다툼을 이유로 전남도 교육에 대한 의정활동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흥빈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의정활동은 상임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임위 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바라는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교육의원들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토부 "北, 임진강댐 통보 후 방류"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태에서 북측이 임진강 댐 방류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18일 밤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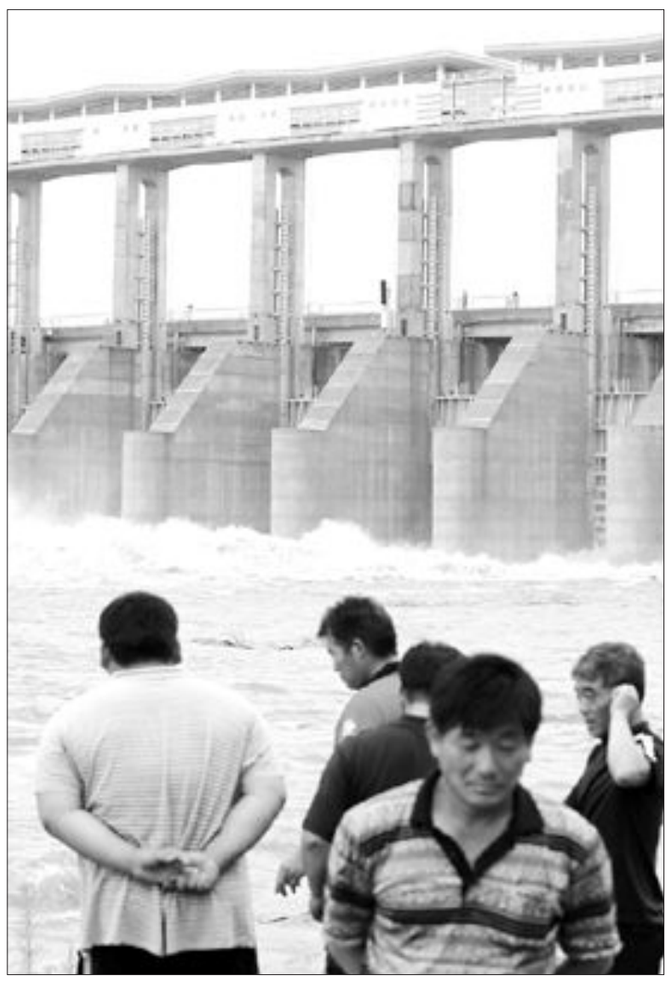
통일부는 "북측이 18일 오후 2시께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오늘 저녁 8시 이후 임진강 상류 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의 통보는 지난해 9월6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역에 사흘째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예고 없이 댐을 방류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로 19일 오후 3시께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는 5m를 넘어섰다. 경기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은 이에 따라 수문을 더 열어 초당 1800t을 하류로 빼내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황강댐에서 횡산수위국까지 46㎞인 점을 고려하면 어젯밤 11~12시께부터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8일 오전 횡산 수위가 3m를 넘자 경보방송을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면서 수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연합뉴스



19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류되는 물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오후 남방한계선 필승교의 수위가 5m를 넘어서자 군남댐은 방류량을 초당 1800톤으로 늘렸다. /연합뉴스

3D업종 근로자에 '복지카드' 발급 추진

광주시, 내년부터 금형업체 시범운영 후 확대키로

광주시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9일 "내년부터 우선 금형업체 상시 근로자 중 1년 이상 3년 이하 근무자로 매달 평균수입이 170만원 이하 소득자 500여 명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금형, 전자, 자동차 부품, 목재, 고무제품 등을 정했으며, 금형업체에 시범적용한 뒤 예산을 감안해 추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카드는 매달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통시장 쇼핑이나 시내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형업체에 대해서만 매년 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다른 지자체와 함께 국비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 업종 종사자들에게 사기진작 및 인력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